여수엑스포 비용 '지방 떠넘기기' 전남도 반발

"국토균형발전사업 … 전액 국비 지원해야"

道 "특별법에 지자체 분담 아무런 언급 없어"

재정부 "수익자 부담 … 기본경비 30% 분담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방비 분담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전남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박람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는 반면 전남도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인 만큼 사업비 전액 국비 지원'을 촉구, 양자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박람회 유치 추진과정에서는 물론 최근까지도 지방비 분담에 대한 언급이나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갑작스런 지방비 분담 요구는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한, 지방에 비용 떠넘기기'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익자 부담' vs '균형발전'=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 '2009년도 조직위원회 예산 1차 심의'과정에서 '박람회 개최와 이에 따른 지역개발의 혜택은 사실상 전남도와 여수시에 돌아간다'는 이유를 들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조직위의 2009년도 운영예산 가운데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책정된 90억 원 중 30%인 27억원을 지방비로 분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엑스포타운 조성비(사업손실금)를 정부와 조직위, 전남도, 여수시가 협의를 통해 분담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또 여수시 관내 도로망 확충과 남해안권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화보집 발간에도 도비 분담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비 분담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09년도 조직위 예산심의를 전면 보류한다는 강수를 뒀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여수세계박람회는 국토 동남권의 성장동력으로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수라는 지역에서 열리지만, 개최효과는 전 국토에 미치는 만큼 사업비도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전남도는 또 '박람회 지원 특별법'에서도 엑스포타운 같은 직접 시설에는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자체 분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만약의 경우 엑스포타운 조성비 1천750억원(추정치) 가운데 30~50%를 지방비로 분담해야 할 경우 오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 무려 525억~875억원을 전남도와 여수시가 분담할 수밖에 없어 지방재정상황이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방에 부담 떠넘기기' 논란=전남도는 새정부 들어 지방비 분담요구가 갑자기 제기된 것은 전남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정부예산이 집중지원되는 데 대한 타지역의 견제를 피해감은 물론 국비부담을 줄여보자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박람회 유치가 확정된 참여정부에서는 물론 최근까지도 '지방비 분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조직위 예산심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엑스포타운 조성과 같은 박람회 직접시설에는 전액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이 정부와 전남도, 조직위 간 묵시적 합의사항이었다"며 갑작스런 지방비 분담요구에 대해 의아해 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여수박람회는 지역사업이 아니라 남해안을 동북아의 해양관광 중심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국가 프로젝트"라며 "여수박람회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로와 주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나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70여명이 4일 오전 나주시의회 앞에서 상여시위를 벌이며 시의원 전원사퇴와 의정비 반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의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민주-무소속 자리다툼 두달째… "더 이상 못 보겠다"

■시민단체, 나주시의회 봉쇄 왜

민주당과 무소속 양편으로 갈려 두 달째 자리다툼을 벌여온 나주시의회가 시민단체에 의해 4일 봉쇄됐다. 나주노인회, 나주사랑청년회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 측이 이날 오전 의회를 봉쇄하고 "자리 다툼만 하는 나주시의원은 모두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출발은 자리 다툼=나주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에 돌입한 것은 지난 6월 25일. 무소속에서 먼저 공세를 취했다. 당시 6명의 무소속 의원은 "2명 많은 8명의 민주당이 의회 직을 독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요구, 이의 수용을 거부하는 민주당과 갈등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무소속 김 모 의원이 민주당 쪽으로 옮겨가 9대 5의 상황이 됐다.

'의원 빼가기'에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전공노 나주시지부장이 중재에 나서 민주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무소속 측에 양보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달 25일 임시회에서 상임위원장 3석을 싹쓸이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무소속 측에 양보키로 한 자치행정위원장에 무소속에서 옮겨온 김모 의원을 밀어 당선시켰다.

◇시민단체 '가세'=무소속 편에 서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이 행동에 나섰다. 4일 오전 시의회 현관 출입문과 의사당 건물 등에 검은색 천으로 대형 'X'자 만장을 걸고, 시의회 출입을 봉쇄한 것이다. 이들은 또 의회 앞 주차장에 근조를 상징하는 꽃상여를 설치하는 한편 주차장에 대형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한 달 넘게 의회 원구성도 못하는 등 파행을 빚은 만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7월 분 의정비 반납과 함께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무소속은 이미 받은 의정비를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무소속 몫 부의장에 당선된 정찬걸 의원은 부의장 사퇴 의사를 이미 밝혔다.

◇파행, 장기화 될 수도=이런 사태를 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지역민들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자리다툼으로 소모전을 계속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지역화합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지역사회 원로들이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가 전체 14석 가운데 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반감에서 출발한 만큼 민주당의 적절한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무소속의 자제도 절실하다는 견해다.

하지만, 그동안 알게 모르게 반목을 거듭해온 무소속 신정훈 나주시장과 민주당 최인기 국회의원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을 조짐도 있어 나주시의회 파행은 장기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나주=정칠현기자 chjung@kwangju.co.kr

"고유가 민생안정책 농·어민 소외"

김영록 의원 "실질 지원 예산 추경의 1%도 안돼"

정부가 추진중인 고유가 민생안정대책이 농·어민을 철저히 소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김영록(해남·진도·완도) 국회의원은 4일 해남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회에 민생안정대책으로 제출한 올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 본 결과 4조9천억원 중 농어업 부분은 전체의 12%인 5천850억원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농어업 예산 중 수입양곡대 지원금 2천78억원을 비롯해 조류독감 사업비 500억원, 어선감축비 2천350억원 등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하거나 지속 추진할 사업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지원비는 전체 지원액의 1%에도 못 미치는 302억원(비료가격 안정대책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조5천억원의 사료구매자금 지원금리 인하 방침과 함께 투입하기로 한 이자절감액 300억원을 포함해도 농어업 민생안정대책 예산은 고작 600억원 정도"라면서 "2007년 농업소득이 비료·사료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13.9% 급감한 데 이어 올해에는 고유가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까지 재개되면서 농어민들은 일어설 힘조차 잃고 있다"며 농어업 부분에 대한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교육세 교부금 정산(1천160억 원)이나 의료급여정산(1천875억)처럼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과 공정률이 20~30%에 불과한 철도망 구축사업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면서 "이는 민생안정대책이라는 예산 편성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비료가격 상승분 전액을 보전하는 비료 가격 차손제도 도입 ▲농어업용 면세유 취급수수료 폐지 ▲금융지원 및 감척 사업비 현실화 등 농어민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방의정비 지급 '가이드라인' 만든다

행정안전부, 다음달까지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지방의원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의정비 지급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가 국회의원 보좌관, 새마을금고 및 신협 상근 임직원 등으로 확대되고,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제한도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정비의 과다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비 결정방식 개선'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개선 방안을 담아 다음 달 초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실제로 행안부는 재정상황 등을 토대로 전국의 자치단체를 몇 개 집단으로 분류한 뒤 의정비 상한액이나 기준액 등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정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어긴 자치단체·의회에 교부세 감액과 같은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11일 '2015 U대회 유치' 토론회

광주시의회가 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 유치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1일 개최한다.

광주시의회는 4일 "오는 11일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상의와 공동으로 '하계유니버시아드 재도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회 차원에서 하계U대회 유치의 필요성과 지원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김철주 2013하계U대회 유치위원회 자문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서고 시의회 조호권 부의장, 김윤석 광주시 경제부시장, 문덕형 광주상의 상근부회장, 박미경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윤이중 전남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